

양돈농가의 부채대책 필요성과 대책 수립방안



특집

1. 농가부채 위험수위

98년 6월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농가가 지고 있는 부채는 총 28조 8,512억원에 이른다. 이 금액을 97년말 농가 가구수인 144만 가구로 나누면 한농가당 2,004만원이라는 거액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의 부채만 하더라도 농가가 갚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특히 IMF로 인해 농산물의 수요가 크게 위축된 현상하에서는 부채가 없다고 하더라도 농가경영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데, 이렇게 큰 규모의 부채가 농민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농가가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올해초 97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농가저축액이 농가부채보다 많다'거나 농가들이 파산하고 연대보증으로 온 마을이 파산위기에 놓여있는 데에도 '실제 파산할 위험에 있는 농가는 많지 않다'거나, 정확한 대책을 수립하여 농업인의 힘을 모아서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려고 하지는 않고 '예산당국의 반대가 심하다'는 등의 회피성 발언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 농민들은 실효성있는 농가부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농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나아가 '국민의 정부'의 농정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가고 있다.

2. 양돈농가 부채는 상환 불가능

농가부채의 심각성은 이미 농촌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축산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 농가의 품목별 부채현황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지만 한농연 경기도연합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본다면 유추할

양돈농가 부채 실태와 해결방안



황 장 수 사무총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표1〉 양돈생산부문 정책사업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농가수	98. 6잔액	98상환	99상환	농가당 평균잔액
돼지경쟁력제고	4,286	320,175	12,912	21,101	74.70
전문종돈업육성	1	750	18	37	750.00
종돈장시설	3	318	7	40	106.00

수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응답자의 평균 농가부채는 9,514만원이지만 양돈의 경우 1억 6,109만원, 양계의 경우 1억 3,057만원, 낙농의 경우 1억 1,956만원으로 양돈의 경우 평균농가부채의 두배에 육박하며, 부업영농의 형태를 띠고 있는 한우를 제외한 축산부문의 대부분이 평균보다 높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정부정책자금 부채의 경우에도 농가당 평균잔액이 양돈의 경우 7천 5백만원이다. 대부분의 농가가 정책자금부채만큼 상호금융이나 기타 부채를 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양돈 농가의 대다수가 1억 5천만원 정도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부채규모가 크다는 것 뿐만 아니라 부채상환능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IMF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돼지는 두당 19만 2천원(환율 1,200원대, 100kg)은 되어야 생산비보장이 된다. 하지만 최근 돼지판매가격은 16만원선으로 두당 3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 된다. 이같은 조건에서 부채의 상환은 거의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설문조사에 응한 20농가중 흑자를 보는 농가는 2농가에 불과하고, 50%가 넘는 12농가는 1,0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채규모가 적다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금회전을 통해 출혈속에서도 부채상환이 가능하겠지만 부채문제를 최대한 회피하려는 정부의 발표자료를 보아도 축산분야의 농가부채와 농가소득간의 비율이 1.22로 가장 높다.

특히 최근 돼지가격의 추이를 본다면 한우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요대체 효과와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인한 수출량 감

소로 인해 8월달 산지가격이 18만원을 기록하였던 것이 9월에는 17만 5천원으로 약간 하락하였다가, 10월에는 16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구나 돼지가격 반등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양돈농가에서는 12월 대란설이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들을 종합해 보건대 양돈농가들의 연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많은 양돈농가들이 파산의 낭떠러지 끝까지 밀려 있다고 하겠다.

3. 양돈농가 부채대책 수립의 필요성

현재와 같이 어려운 조건에서 정책자금 및 상호금융의 상환을 요구하고, 연체시 고율의 연체이자를 물리는 경우에는 양돈농가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양돈농가 파산을 가져야 생산기반이 완전히 파괴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우려가

〈표2〉 작목별 농가부채 및 농업소득 현황(97년)

(단위 : 천원)

작목	부채규모	농업소득	A/B
경종	13,315	15,214	0.88
축산	40,399	33,186	1.22
채소	18,162	18,465	0.98
화훼	39,460	17,327	2.28
과실	16,564	21,970	0.75
특작	33,916	21,778	1.56

자료 : '97농가경제조사속보

있다.

특히 양돈농가의 정책자금은 대부분 양돈 전업농 등 주도영농층이 모여 양돈단지 형태로 용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단일 사업당 부채규모가 거대하여 양돈단지의 파산은 곧바로 연대보증으로 연결된 주변 농가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의 파괴까지 초래하여 농업공황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농가경제의 파산을 방지하고 농업생산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가부채대책 수립은 필수적이다. 나아가 양돈농가의 경우 파산시 그 파급효과가 큰 만큼 대책수립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이다.

4. 양돈농가 부채대책 방안

양돈농가의 부채대책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부채대책과 같다. 정책자금의 경우 2년간 상환유예하고, 정책자금 금리는 IMF 이전 수준인 5%로 인하하여야 한다. 또한 상호금융 대출자금도 마찬가지로 상환유예하고 금리는 10%로 인하하여야 한다.

또한 상호금융대출자금과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적절하게 연장하여 현재 생산위기에 처한 양돈농가의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

특히 경감대상 정책지원 사

업에서 양돈이 포함되는 축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부채경감해 줌으로써 IMF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분야에 대해 우선적인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부적절한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비농업분야의 형평성 시비와 농업분야 내부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농업부문의 비효율적인 투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계속 제기되는 속에서 경감대상 농가에 대한 엄격한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부채대책에 대해 국민적인 거부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농가부채 경감대상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채규모에 따라 농림부, 시군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한 기준을 통해 퇴출 혹은 경감, 추가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사업과 맞지 않는 사업을 시행한 농가의 경우 경감에 제한조건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원금과 용자금을 사업실적보다 과도하게 수혜한 경우에는 과다수혜 금액분에 대해서는 제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용자금을 타용도로 전환한 경우 타용도 전환분에 대해서는 타용도 전환이 정책사업 내부인 경우(예, 양돈사업으

로 용자받아 한우사육에 투자한 경우)에는 경감후순위로 처리, 비농업분야 및 정책사업 외부로 전환한 경우에는 회수 및 경감 불가로 분리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상호금융의 경우 대환조치 등을 통해 상환유예조치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보증인 확보가 여의치 않은 관계로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부채규모가 큰 양돈농가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5. 양돈농가 부채대책 수립은 농업인의 단결된 힘으로

어려운 양돈농가의 현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는 부채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그동안 농업인단체들은 '부채대책위원회'를 통해 대화와 토론으로 부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로서는 무망하다.

농림부와 정부의 제한적인 부채대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양돈인들이 양돈협회로 모이고, 농업경영인들이 농업경영인연합회로 모여, 농업인의 힘을 통해서 농가부채대책을 실효성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養豚**